

###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 중점 추진과제'

# 일자리 · 상권 확장, 창업 · 기업운영 활성화

전북도가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19 중점 추진과제는 일자리와 상권을 지키고 확장, 창업과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전북 경제의 회복과 활력을 불어넣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혁신형 경제기반 구축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19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 경제분야 실무위원회를 열어 전북 경제의 경기반등 모멘텀에 집중하고 투자성장 잠재력 제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45개 과제를 발굴했다. 9일 진행된 제1차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분야에 대한 정부 동향과 관계기관 협력 등을 증명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열었다. 7대 분야 45개 과제를 담은 전북도가 마련한 일자리 ·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 여파 고용 악화 대응 위한 '일자리 지키기'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와 민간 고용창출력 부족에 따른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를 통한 '일자리 키우기',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 경제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10개 과제를 발굴했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우리 일자리 지키기 지원 사업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30%)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정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종사자 2만5,500명에게 생계안정비 지원(1인당 50만원, 총 51억)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켜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키우기는 신중년 · 청년 일자리 두배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신중년 · 청년 추가채용을 촉진, 대상인원과 지원금액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주 15~30시간, 5개월 이내)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을 통해 익산, 김제, 완주 3개 지역에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를 창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

공모 대응으로 2024년까지 4,587억투자, 1,9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새 일자리' 만들기는 비대면 IT 활용 가능한 민간 기업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지원과 우수기업, 전자차 전문기업, 여성 친화기업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진흥 · 금융사각지대 포용정책 추진 또한, 도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골목상권으로의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북적북적 골목가게 지원, 금융사각지대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8개 과제를 도출했다.

디지털 골목상권으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통합앱(가칭 '오늘의Pick')을 개발, 음식배달 외에 전통 시장, 수산물, 농산물, 숙박, 뷰티 등 소상공인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한 우리동네 골목가게 만들기 등을 통해, 스마트도어,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상점 조성을 지원, 스마트트렌드에 맞춘 소상공인의 인식 향상 및 디지털 골목상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북적북적 우리동네 골목가게 지원은 상생형 소상공인 문화거리 활성화로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한 상가 거리에 버스킹 등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 행사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며 중소기업 소상공

인 판로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사는게 즐거워진다'를 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와 불거리 행사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금융 사각지대 포용정책으로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을 신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유형업소에 최대 1,000만원 한도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가정 '전북희망론'을 신설, 금융소외계층의 가계안정 및 경제력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창업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시대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혁신창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경제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북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9개 과제를 꼽았다. 창업기관 보유자원의 효율적 활용 모색을 위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25개 기관이 참여, 기관별 보유자원 공유 및 정부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전북도의 벤처캐피탈, 초기 투자자 부족에 따른 신규 특화 펀드를 개발 조성, 도 외 초기 투자자들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창업 붐 조성 및 창업도약 성장단계의 지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창업성장 엑셀러레이팅 확대, (4억원 30개사) 창업기업 해외판로를 지원한다. 핀테크(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등 금융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투자까지 체계적인 육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NPS 빅데이터 분석 혁신센터 설치, 도내대학을 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전북 특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유망 핀

테크 기업에 선별해 국내외 투자자와 연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국외(베트남)에 신남방 글로벌 창업거점으로서 스타트업 집적공간을 조성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기술창업 생태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대규모 투자기업 및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발굴했다. 전북도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전북 산업구조 개편방안, 연계한 타깃기업 발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체계적인 기업유치 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시 업종 제한 폐지 투자고용 요건 완화(20명→10명),

신설법인 투자요건 완화(50억→30억),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상향(50억→80억) 등 확대된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리쇼어링 기업유치를 위해 새만금 5공구에 전용 임대단지를 지정, 기반시설 설치비, 이점비용 추가지원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인센티브 개정에 맞춰 전북도도 추가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 공모를 통해 부처별 사업을 패키

지 지원하는 전북도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 사업에 공모 대응과 2차전지 소재업체 유치를 위한 R&D 지원, 중대형 2차 전지 시합인증 센터구축,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구축, 2차전지 생산업체 유치전략 수립 등 새만금 에너지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 금융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경영자금, 자금상황유예 등 도내 중소기업의 긴급유동성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과제를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 구축 끝으로, 도는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3개 과제를 수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유통조직 설립과 사회적 경제 가치평가를 토대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지원지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포스트 코로나19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북도가 발굴한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며 "이번에 마련한 과제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욱 새롭게 진화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수출 활력 제고 수출 시장 위축에 따른 위기극복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3개 과제를 발굴, 코트라(84개국 127개무역관), 경진원(25개국 50개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SNS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연계 지원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해외마케팅 전략 강화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수출기업 불류피해 지원,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수출활력 촉진단을 운영, 수출 유관기관 협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최적지에 '적합'

### 도의회 김희수 의원, 촉구건의안 발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전북도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9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전북도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9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30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전북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따르면 개정법률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 하나를 지정해 운영·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공포(5월 19일)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준비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 진흥원 지정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진흥원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철강소재 · 부품 ·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전북의 탄소산업이 대일본 의존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국내 유일 탄소제조 기업인 효성 등 관련기업이 집적해 있다"며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승인하면서 전북은 국내 탄소산업 진흥원 지정은 최근 지역경제 파탄을 겪으면서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대통령의 공약인 '탄소산업이 메카 전북' 실현의 시발점인만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이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전북에 지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최적지로 전북이 지목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최근 지역경제 파탄을 겪으면서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대통령의 공약인 '탄소산업이 메카 전북' 실현의 시발점인만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이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전북에 지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나기학 도의원, 노동환경 개선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에서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취약 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를 낮추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위험 외주화 방지와 안전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시행됐

으나 적용범위도 좁고 처벌수위도 낮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핵심이 되는 8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비준의 미이행 시, 무역 제재의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의심되면 '1339'로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개최

9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의 개회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균형발전 역행 리쇼어링 즉각 철회를"

### 도의회 이명연 의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내버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11)은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강하게 항의했다. 리쇼어링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조금 150억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현재 차일피일 미루지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지 말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종2'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조급함과 부족함을 부각시켰고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유호상 기자